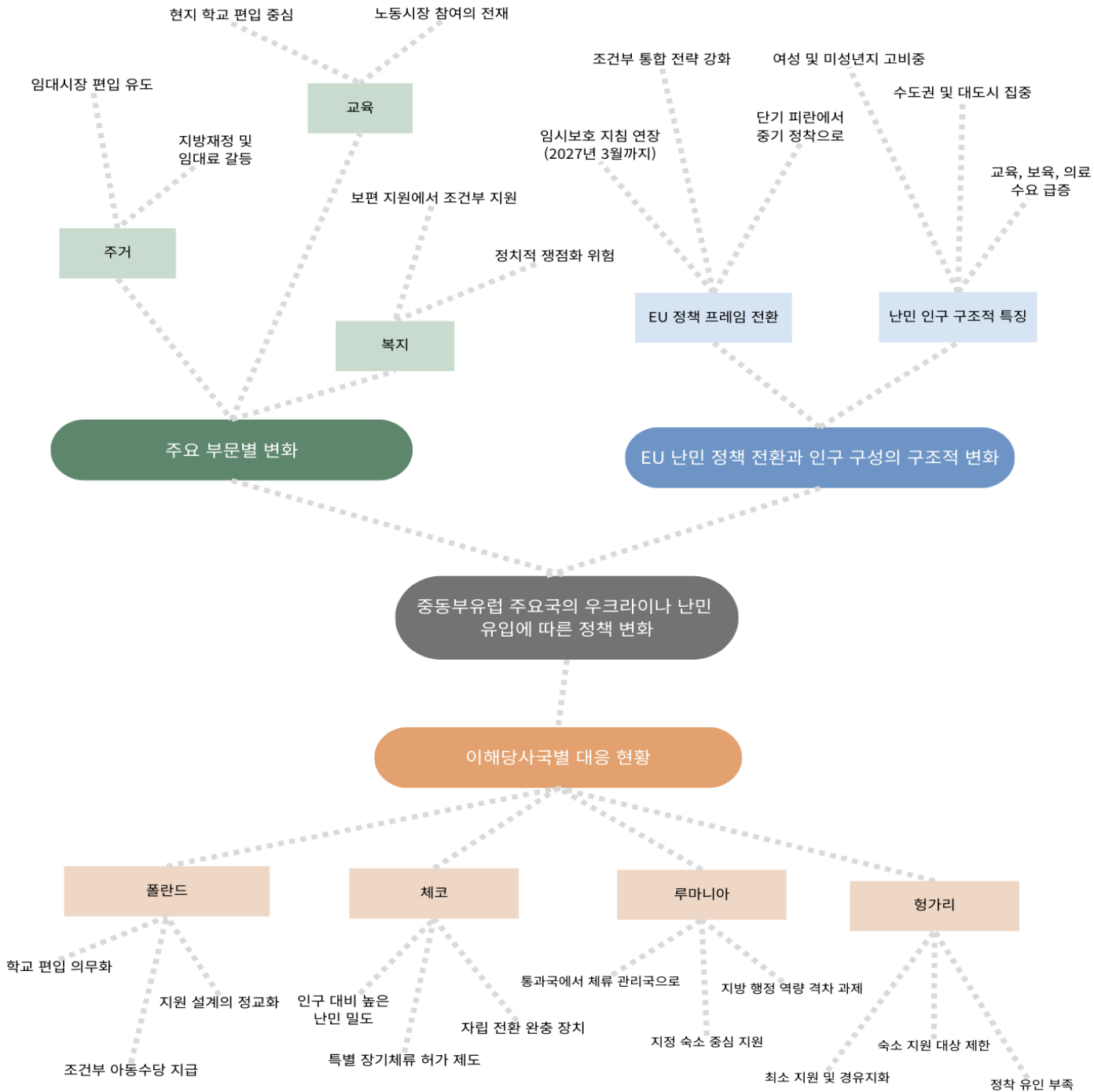


빅데이터로 보는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에 따른 정책 변화

(*) 중동부유럽내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정책 변화 관련 이슈 5,215건
(2025.5.1.-12.24)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에 따른 정책 변화

〈핵심 요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EU 임시보호 연장은 중동부유럽 주요 수용국의 난민 정책을 단기 인도주의 대응에서 중기 체류·통합 관리 단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폴란드·체코·루마니아·헝가리는 공통적으로 여성·아동 비중이 높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교육·주거·의료 수요 증가, 지방재정 부담, 사회적 긴장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 규모 자체보다 인구 구성과 지역 집중도가 정책 설계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 국가별로 보면, 폴란드와 체코는 난민의 중기 체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건부 통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폴란드는 아동의 현지 학교 편입을 의무화하고 복지 지원을 교육·구직 요건과 연계하며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체코는 임시보호 이후 장기체류 전환 경로를 제도화해 난민을 ‘단기 피란민’이 아닌 잠재적 장기 거주자로 재분류하고 있다. 반면 루마니아는 지정 숙소 중심의 관리형 체류 정책을 유지하며 재정 부담을 통제하고, 헝가리는 최소 지원 기조 속에서 난민 이동을 촉진하는 ‘경유지화’ 구조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 결과적으로 중동부유럽의 난민 정책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어떤 조건과 인프라를 통해 통합을 관리할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교육·주거·노동시장·지방재정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정책은 통합 촉진이 아니라 취약계층 탈락과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난민 정책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와 국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정책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 임시보호 연장과 동유럽 4개국의 인구·노동시장·사회갈 등 변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유럽에 대규모 강제이주를 촉발했다. 유럽연합(EU)은 같은 해 3월 「임시보호 지침(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을 발동해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집단적 체류 권리, 노동시장 접근, 교육·보건 서비스 접근을 신속히 부여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EU 차원의 임시보호는 반복 연장됐고, 2025년 6월 EU 이사회는 임시보호 적용을 2027년 3월 4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결정은 ‘단기 피란’이라는 초기 전제에서 ‘중기 체류’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도록 수용국에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 정책이 ‘단기 보호’에서 ‘중기 정착 관리’로 이동하면서, 수용국이 우선적으로 마주하는 변수는 난민의 규모뿐 아니라 성·연령 구성과 거주지 분포 같은 인구 구조였다. 2025년 12월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은 폴란드·체코·루마니아·헝가리 4개국에서 인구 구조(성·연령 구성, 지역 분포, 노동시장 진입)와 사회문제(주거, 교육, 의료, 재정 부담, 여론·정치 갈등)에 직접적인 변화를 끼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인구학적 특징은 성인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아동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전시 동원과 출국 제한, 가족 단위 피란이 결합한 결과이며, 수용국 입장에서는 ‘노동력 유입’에 그치지 않고 교육·보육·의료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인구 충격으로 체감된다. Eurostat는 2025년 10월 말 기준 EU 내 임시보호 수혜자의 연령·성별 구성을 제시하며, 회원국 전반에서 여성과 미성년층 비중이 높은 공통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난민의 지역 분포 역시 국경지대에 고착되기보다 수도권·대도시·산업 거점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과 공공서비스 과부하가, 중기적으로는 학교·보건·주택 인프라 확충을 둘러싼 지방재정 부담과 정치적 논쟁이 확대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4개국 모두 전쟁 초기에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자발적 지원이 급증하며 ‘환대(Welcome)’ 프레임이 강했지만, 2023~2025년으로 갈수록 비용과 지속가능성, 내국인과의 자원 경쟁, 치안 부담 등으로 의제가 이동했다. 특히 복지 급여를 학교 출석, 구직 등록, 소득 심사 등 ‘통합 유인’과 연계하는 방식의 정책 조정이 공통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국가별 난민 정책 동향

폴란드 난민정책 전환 학교 편입 의무화와 지원 요건 강화

폴란드는 지리적 인접성과 대규모 국경 통과로 2022년 이후 유럽 내 최대 규모의 난민 유입을 경험했다. 시간이 지나며 일부는 독일 등 제3국으로 이동하거나 우크라이나로 귀환했지만, 2025년에도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이 잔류하

면서 노동시장과 대도시 인구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Eurostat가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의 임시보호 수혜자는 965,005명으로 집계됐다.

폴란드 난민정책에서 가장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현지 학교 편입'이다. 2024년 9월 1일부터 임시보호를 받은 우크라이나 아동의 폴란드 학교 의무 출석이 제도화되면서, 원격(우크라이나) 수업만으로 의무교육을 대체하던 관행은 점차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교육 정책에 국한된 조치라기보다, 돌봄 공백을 줄이고 여성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하려는 통합 전략의 축으로 기능한다. 아동이 학교·돌봄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될수록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의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수 기반과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가 재정렬되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난민 정책이 '긴급 대응'에서 '지속 관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현금성 지원도 무조건적 지급에서 조건부 지급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025년 7월 폴란드 당국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적 보편적 아동수당인 '800+'(자녀 1인당 매월 800즐로티 지급)와 학기 초 학용품·교육비를 지원하는 일회성 급여 'Good Start'를 난민 아동의 폴란드 교육체계 편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재정비 하였다.

다만 조건 강화가 정치 의제로 부상할 경우, 정책이 '통합 촉진'이 아니라 '지원 축소 경쟁'으로 전환될 위험도 존재한다. 2025년 여름 난민 지원 연장 법안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와 지원 요건 논쟁이 보도된 것은 복지 논점이 선거·정당 경쟁과 결합할 때 정책이 급격히 경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도시 임대료 상승과 교육 수용능력 확충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폴란드 난민정책은 결국 '지원 규모'의 확대·축소보다 '지원 설계의 정교함'이 성패를 가르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체코 난민정책의 전환... 임시보호에서 장기체류로

체코는 절대 규모로는 폴란드보다 작지만, 인구 대비 임시보호 수혜 비중이 높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학교 수용 능력 압력이 커졌다. Eurostat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체코의 임시보호 수혜자를 393,005명으로 집계한바, 전문가들은 인구 대비 밀도가 높다는 점이 국가 평균의 '여력'과 별개로, 특정 지역에서 주거·교육·보건 병목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라하 등 대도시의 임대시장과 초·중등 교육 수용 능력은 사회적 긴장과 여론 분화를 촉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코 난민 정책의 특징은 위기 대응을 넘어 '임시보호 이후의 합법 체류 경로'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UNHCR의 체코 안내문은 Lex Ukraine VII(2025년 2월 11일 채택)을 근거로, 임시보호 보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 장기 체류 허가(special long-term residence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U 이주·내무총국도 2025년 11월

해당 제도를 소개하며, 특별 장기체류 허가가 최대 5년의 합법 체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임시보호자의 ‘신분 전환’이 단순한 예외 조치가 아니라 실제 정책 수단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제도는 체류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는다. 체코가 난민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피란민’으로만 보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 거주로 전환될 수 있는 집단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고용·주거 정책도 단기 지원의 연장보다, 재정 부담을 통제하면서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주거비·현금 지원을 소득 심사와 결합하는 접근은 그 연장선에 있다. 정책적 관건은 전환 경로가 ‘정착유인’으로만 남지 않도록, 언어 교육·자격 인정·돌봄 같은 통합 인프라 확충과 연결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루마니아, 통과국 대응에서 관리형 체류 정책으로 전환

루마니아는 전쟁 초기 국경 통과 규모가 커 ‘통과국(transit country)’ 성격이 강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정 규모의 난민 체류가 점차 고착됐다. 이에 따라 정책 대응도 단기 이동 지원에서 벗어나, 제한된 재정 여력 속에서 체류 관리와 비용 통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Eurostat 기준 2025년 10월 말 EU 전체 임시보호 규모는 430만 명이며, 루마니아에도 19만 7,675명이 임시보호 상태로 집계됐다.

루마니아 정부의 대응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정 숙소(designated accommodation) 중심 지원과 조건부 현금·서비스 제공을 결합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EU 이주·내무총국은 루마니아 정부가 긴급명령을 통해 지정 숙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숙소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UNHCR 또한 루마니아가 집단 쉼터 등 기존 수혜자에 한해 2025년 말까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모든 난민에게 동일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이미 공공 숙소 체계에 편입된 집단을 중심으로 지원을 유지하며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지정 숙소 지원은 단독 월 500 RON(약 15만 원), 가족 월 1,500 RON(약 45만 원) 수준의 숙소비를 보전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 입국한 장애·만성질환자·임산부 등 취약계층도 요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지정 숙소 이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또한 추가 현금 지원은 단독 750 RON(약 22만 5천 원), 가족 2,000 RON(약 60만 원)(3개월)로 제시되며, 성인은 지역 고용기관 등록, 아동은 교육체계 등록(재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동시에 루마니아는 현금·서비스 지원을 교육 참여와 구직 활동과 연계해, 단순한 체류 비용을 ‘통합 성과’로 전환하려는 유인을 설계해 왔다. 유럽 망명정보데이터베이스(AIDA)의 루마니아 보고서는 2023년 이후 주거·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조정되며 대상과 방식이 변화해 왔고, 2024년에는 특정 지원을 도입·개선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정리한다.

루마니아 정책의 구조적 위험요인은 지역 간 행정 역량 격차다. 숙소와 일부 사회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시설 수준, 통·번역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이 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루마니아 난민정책의 지속가능성은 EU 기금의 안정적 활용 여부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교육 편입 절차, 의료 접근 경로, 취약 계층 우선지원 기준)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헝가리, 최소 지원과 경유지화 전략

헝가리는 EU 임시보호 틀을 적용하고 있으나, 폴란드·체코·루마니아와 비교할 때 정부의 직접 지원 수준은 가장 제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지원이 제한될수록 난민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두터운 국가로 이동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헝가리에 정착하는 난민이 적다’는 통계를 강화해 추가적인 지원 축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되돌아온다. 즉 정책 선택이 난민의 이동 경로를 바꾸고, 그 이동 경로가 다시 정책 선택을 강화하는 ‘경유지화(transitization)’의 자기 강화 메커니즘이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거 지원 정책 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4년 6월 제정된 정부령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국가 무료 숙소 지원 대상이 ‘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지역’ 출신으로 제한되면서, 서부 우크라이나 트란스카르파티아(자카르파타) 등 비교적 안전 지역 출신 우크라이나인 다수가 퇴거 위험에 놓였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당시 헝가리의 임시보호 등록자는 약 4만6천 명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 지원 숙소에 의존하던 취약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후 숙소 접근 요건은 더욱 절차화되었다. 임시보호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신청·입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주거 지원이 낮은 수준에서 더 좁게 배분되는 구조가 고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난민 아동의 학교 편입, 성인의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주거 불안이 비공식 노동이나 노숙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 비록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다른 수용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 보호의 형평성과 EU 법상 ‘최소 기준’ 준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내 정책 선택의 영역을 넘어, 임시보호 지침 이행을 둘러싼 EU 차원의 감시와 조정과도 연결돼 헝가리 난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헝가리의 정책 과제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데 있기보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완하는 데 있다. 특히 취약 난민이 주거에서 이탈해 비공식 노동이나 노숙 상태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시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 편입·돌봄·고용 연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장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경유지화의 자기강화’를 완화하는 핵심 조건으로 남아 있다.

4개국 난민정책 비교: 주거·교육·복지 부문에서의 변화

① 주거 부문

4국가 모두 주거 정책을 전쟁 초기의 ‘공공-민간 임시 수용’에서 벗어나, 임대시장 편입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재정 여력·도시 구조·정치 환경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폴란드는 대규모 잔류와 수도권·대도시 집중으로 임대료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주거 정책이 단순한 복지 영역을 넘어 지방재정 부담과 여론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 보조와 공공 지원은 취약성 심사, 소득·취업 요건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점차 조건화되고 있으며, 주거 지원 여부가 사실상 ‘통합 가능성’을 가르는 관문으로 작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체코 역시 프라하를 중심으로 임대시장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거 문제가 장기 체류 관리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체코에서는 임대시장 편입이 기본 경로로 설정되는 동시에, 공공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자립 가능 집단을 선별하려는 정책 조정이 병행되고 있다.

반면 루마니아는 임대시장 편입을 전면화하기보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정 숙소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모든 난민을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이미 공공 체계에 편입된 집단을 중심으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비용을 통제하고 행정 부담을 관리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헝가리는 공공 숙소 지원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주거 정책을 EU 법상 최소 기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난민의 정착 가능성은 낮아지고, 헝가리는 실질적으로 ‘정착이 어려운 경유지’로 기능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② 교육 부문

교육 정책은 네 국가 모두에서 원격 대체 허용에서 현지 학교 편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제도화 수준과 정책적 의미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폴란드는 2024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 아동의 폴란드 학교 출석을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교육 편입을 난민 통합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다. 즉 교육 정책이 노동시장·복지 정책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사례다. 체코 역시 아동의 교육 편입을 장기 체류 전환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언어 교육, 학습 보조,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교육 편입을 단기 보호가 아닌 중기 정착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교육 참여를 현금·서비스 지원의 조건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학교·교원·보조 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커 정책 효과는 균등하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편입이 통합 수단으로 작동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형식적 요건에 머무는 한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학교 편입과 언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교육이 장기 통합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 교육이 '정착 기반'이 아니라 '체류 기간 중 관리 과제'에 머무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③ 복지 부문

복지 정책은 네 국가 모두에서 '무조건 지원'에서 '통합 유인'을 결합한 조건부 지원으로 바뀌었다. 폴란드는 아동수당과 생활 지원을 교육 참여, 구직 등록, 소득 심사와 연계하면서 복지 설계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는 통합을 촉진하는 도구인 동시에, 선거·정당 경쟁과 결합해 정치적 쟁점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체코는 복지 지원을 장기체류 전환 경로와 병행 설계함으로써, 복지를 '체류 유지 수단'이 아니라 '자립 전환의 완충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성이 정책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된다.

루마니아는 지정 숙소 중심 지원을 유지하되, 현금·식비·서비스 제공을 교육·고용 참여 요건과 결합해 선별적으로 지속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재정 제약 속에서 복지 범위를 통제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반면 헝가리는 복지 지원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통합 유인보다는 이동 유인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복지가 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난민의 체류 결정을 외부로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중동부유럽 난민 정책의 구조적 전환… 정책적 시사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는 공통적으로 인도주의적 긴급 대응 단계에서 출발했으나, 2025년 말에 이르러서는 난민 정책의 성격이 명확히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국경 개방, 무조건적 체류 허용,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접근 보장이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재정 지속성과 사회 수용성 관리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조건부 통합(conditional integration)이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네 국가 모두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전환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적 선택이라기보다 장기화된 대규모 난민 유입이 초래한 정책 환경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조건부 통합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재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폴란드와 체코를 중심으로 나타난 변화는 난민에 대한 권리 부여 자체를 철회하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 참여, 구직 등록, 합법 취업 여부와 같은 사회 통합 지표를 정책 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복지 지출을 통제하는 동시에,

난민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려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 돌봄, 언어 교육과 같은 기초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2024~2025년 폴란드에서 나타난 정책 조정은 아동의 현지 학교 편입을 전제로 복지 수당을 유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교육 체계가 난민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헝가리처럼 조건은 존재하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인 경우, 조건화는 통합 촉진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탈락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난민 유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국가 평균 차원이 아니라 도시·지방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는 난민 잔류 규모가 크고 대도시 집중도가 높아, 주거·교육·보건 서비스에 대한 압력이 특정 지역에 누적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난민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문제로만 다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 정책 성패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학교와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와 같은 구조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2025년 현재까지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난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더라도 지방 차원의 인프라 확충과 재정 이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 완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교육 과밀 문제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셋째, 정치적 갈등 관리는 난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였다. 폴란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난민 지원은 선거 일정, 복지 체계 개편, 대외 정책 노선과 결합되며 빠르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책이 정치적 경쟁의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적 통합 전략보다는 단기적 상징 조치가 우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이미 체류 중인 난민과 수용 사회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전문가들은 난민 정책이 국내 정치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종속될수록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대로 체코처럼 체류 전환 경로를 제도화하고, 일정한 규칙을 명문화한 경우 정책 논쟁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부연했다.

넷째, 임시보호 연장 자체는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EU 차원의 임시보호 연장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이는 시간 확보 수단에 불과하다. 2027년까지의 보호 연장 기간 동안 각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임시 체류 이후의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장기체류 전환, 직업 자격 인정, 교육 이수 경로, 사회보험 참여 규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임시보호는 사실상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가 특별 장기체류 허가 제도를 통해 임시보호 이후의 제도적 출구를 마련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헝가리처럼 지원 수준이 낮고 전환 경로가 불분명한 국가에서는, 제도적 선택지가 존재하더라도 난민의 정착 유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폴란드·체코·루마니아·헝가리의 난민 정책은 공통적으로 단기 인도주의 대응에서 중기 통합 관리 체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난민 수용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인구 구조, 도시 정책, 복지 국가의 작동 방식, 정치적 합의 구조를 동시에 재편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Balkan Insights, Hungary's Orban Plays on Anti-Ukrainian Refugee Sentiment in Election Campaign, 2025.12.22
- Eurostat, Temporary protection for persons fleeing Ukraine – monthly statistics, 2025.12.05
- European Commission, Publication of a government report on integration, a guide to migrant healthcare work and measures for people displaced from Ukraine in the Czech Republic, 2025.11.21
- UNHCR, Temporary Protection Czechia, 2025.11.19
- EUObserver, How the rightwing in Czech Republic and Hungary is targeting Ukrainian refugees, 2025.09.26
- Reuters, Polish president's veto threatens Ukraine's Starlink access amid refugee aid dispute, 2025.08.26
- EU Neighbours East, European Solidarity Corps: assistance to Ukrainian refugees in Romania, 2025.08.08
- European Commission, Poland sees changes to family reunification, new benefit requirements for those displaced from Ukraine and the launch of a vaccination campaign, 2025.07.23
- Reliefweb, Poland: Analysis of the impact of refugees from Ukraine on the economy of Poland – 2nd edition, 2025.06.16
- European Council, EU member states agree to extend temporary protection for refugees from Ukraine, 2025.06.13
- European Commission, Romania: Extension of accommodation support for people displaced from Ukraine, 2025.03.20
- UNHCR, Special Long-Term Residence Permit Czechia, 2025
- UNHCR, Housing and accommodation, 2025
- AsylumInEurope, Temporary Protection Romania, 2024
- Visit Ukraine, Compulsory school education in Poland: new rules and fines from September 1, 2024, 2024.09.05
- Euronews, Ukrainian refugees face homelessness after Hungarian asylum rule change, 2024.08.21

월간정세 이슈 선정 프로세스

※ 국가 네트워크 관계 분석 목적

국가간 발생한 다양한 월간 이슈에
대한 통합된 정보 제공

데이터 수집원

종합언론지 | 비즈니스 매체 | 관영 매체

웹크롤링

뉴스 DB

45,000 ~ 50,000건/Month

LSTM
(문서분류)

Non Spam 뉴스 DB

키워드
상관분석

국가간 상관 데이터셋

Spam 뉴스 DB

사건사고 기사



재난재해 기사



행사정보 기사



기상정보 기사



생활정보 기사



스포츠정보 기사



상관 값 국가① 국가② 국가③ 국가④ 국가⑤

키워드 ①	0.0	0.1	0.0	0.1	0.0
키워드 ②	0.1	0.0	0.0	0.1	0.1
키워드 ③	0.1	0.7	0.6	0.1	0.1
키워드 ④	0.9	0.2	0.5	0.2	0.5
키워드 ⑤	0.0	0.1	0.2	0.2	0.1

ex) 국가②와 국가③은 키워드 ③과 연결되어 있음

월간정세 이슈 선정 프로세스

① 데이터 수집

주요 신흥국가종합언론지, 비즈니스매체, 관영매체 351건으로부터 정치/경제/사회뉴스 기사들을 일일 수집하고 있음
현지트래픽 비율과 관계자인터뷰를 통해 유력매체유무를 검증하고 있으며 월 기준 45,000~50,000개 데이터를 수집함

(*) 수행사례 '러시아/유라시아 데이터 수집'

No	권역	국가	정보원	URL	현지 트래픽
1	인도·남아시아	네팔	Aarthiknews	english.aarthiknews.com	94.10%
2		인도	The Economic Times	economictimes.indiatimes.com	89.30%
3		아프가니스탄	Pajhwok Afghan News	www.pajhwok.com/en	24.80%

... (인도·남아시아 : 총 65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러시아 유라시아	몽골	DN	dnn.mn	95.40%
2		러시아	the Moscow Times	themoscowtimes.com	95.26%
3		유라시아	CA-News	ca-news.org	91.97%

... (러시아/유라시아 : 총 69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동남 아시아	베트남	Thanh Nien	www.thanhniennnews.com	93.59%
2		말레이시아	Free Malaysia Today	www.freemalaysiatoday.com	92.25%
3		필리핀	The Manila Times	www.manilatimes.net	89.16%

... (동남아시아 : 총 32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중동부 유럽	슬로바키아	SLOVAK SPECTATOR	spectator.sme.sk	89.52%
2		불가리아	Dnevnik	www.dnevnik.bg	85.21%
3		세르비아	B92	www.b92.net/eng	78.14%

... (중동부유럽 : 총 52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중남미	페루	ANDINA	andina.pe/ingles	97.10%
2		베네수엘라	Today Venezuela	todayvenezuela.com	95.10%
3		콜롬비아	Explica	www.explica.co	91.30%

... (중남미 : 총 32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중동 아프리카	남아공	News24	www.news24.com	91.94%
2		쿠웨이트	Kuwait Times	news.kuwaittimes.net	91.66%
3		사우디아라비아	Eye of Riyadh	www.eyeofriyadh.com	90.57%

... (중동아프리카 : 총 111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월간정세 이슈 선정 프로세스

② 스팸 분류

수집된 뉴스기사 중 하기 유형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머신러닝 방법론을 통해 배제함

머신러닝 모델로는 LSTM(Long Short Term Memory Model)을 적용 _분류 정확도는 약 89.8%

※ 정확도: (정확히 추출된 결과 정보의 수 / 전체 결과 정보의 수) *

스팸 문서분류 기준

- 사건사고: 교통사고, 살인, 성범죄 등
- 재난재해: 화재, 지진, 홍수 등
- 행사정보: 전시회, 콘서트, 엑스포, 월드컵 등
- 기상정보: 일일 기상뉴스 정보
- 비즈니스 및 생활정보: 경영 정보, 생활노하우 등
- 스포츠 정보: 축구, 배구, 농구, 크리켓 등 정보
- 기타: 수상 및 시상 정보, 유명인사 사망 정보, 단순 증시 등락 정보

③ 키워드 상관 분석

월간정세 이슈 분석은 '국가간에 발생하는 이슈'를 분석하여 **특정 권역 이슈의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가별 네트워크 분석(SNA)을 진행하고 있음

Step 01. 동시출현 단어(Co-occurrence) 데이터셋 만들기

단어의 연결성을 찾기 위해 단어 간에 동시에 출현한 데이터 셋을 생성함

※ 상관계수: 키워드 a와 키워드 b가 함께 변하는 정도 / 키워드 a와 b가 각각 변하는 정도

Step 02. 국가별 관련 기사 조사

관계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국가별 실제 기사를 조사하고 주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함

(*) 국가별 관련 기사 추출 예시

No.	매체명	국가	기사 제목
01	Tass	러시아	Putin Signs Law Revoking Nuclear Test Ban Treaty
02	Tass	러시아	US seeking to deploy missile systems banned by INF Treaty — Russian diplomat
03	Tass	러시아	Experts see no alternatives to CFE treaty for decades due to NATO's anti Russian stance
04	CNBC	글로벌	NATO rebukes Russia for withdrawing from post Cold War treaty; Kyiv slams talk of 2024 elections
05	ABC News	글로벌	Putin signs bill revoking Russia's ratification of a global nuclear test ban treaty
06	BBC	글로벌	Putin pulls Russia out of nuclear test ban treaty
07	BBC	글로벌	US, NATO Follow Russia in Dropping Out of Europe Arms Treaty

Step 03. 보고서 시각화